

전 국민 70% “5·18 헌법 전문 반드시 수록 되길”

5·18기념재단, 국민 인식조사 진상규명 1순위 ‘은폐·왜곡·조작’ “신군부 부정축재 비자금 환수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5·18 진실규명’을 꼽았고, 신군부 비자금 환수 활동에 대한 지지도 높게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알앤씨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5·18 인식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응답자의 47.4%가 ‘매우 필요하다’, 20%는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7.4%가 헌법 전문화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5·18과 관련해 시급하게 규명할 과제로는 ‘5·18민주화운동 은폐·왜곡·조작’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책임’(24.2%), ‘5·18 희생자의 암매장 의혹’(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5·18 진실규명’이 3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5·18 왜곡과 편향 방지’(20.0%), ‘5·18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19.8%), ‘5·18 민주유공자의 예우·처우 개선’(19.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부정축재한

비자금 환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56.5%가 ‘매우 필요하다’, 16.5%는 ‘필요하다’고 응답해 73.0%가 ‘비자금 환수 활동’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18 국민인식지수는 72.9점으로 지난해 조사결과(72.9점)와 동일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95.3%로 전년(90.6%) 대비 4.7%p 증가했고, 지난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에 대한 인지 여부 추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인지 비율이 상승했다.

이중 대구·경북지역의 5·18 인지 비율이 전년 대비 14.8%p 상승해 전국에서 증감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1년간 5·18 관련 정보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8.7%로 전년 대비 1.7%p 증가했다.

이전 조사결과와 다르게 ‘동영상 서비스’가 매체 중 접촉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TV’에 의한 접촉 빈도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단에서 최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64.0%로 전년 대비 긍정 비율이 5.9%p 증가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인식 조사를 통해 재단이 집중해야 할 사업으로는 ‘진실규명 및 진실알리기’가 높게 조사됐다”며 “5·18헌법전문 수록과 완전한 진실 규명,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만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자연재해 예방 노후간판 철거

13일 광주 북구청과 옥외광고물협회 관계자들이 문흥동의 한 상가에서 여름철 강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제주항공참사 유가족들, 사고 책임자 15명 고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은 13일 오전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사고 책임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 항공정장 △제주항공 대표이사, 정비본부장, 안전보안본부장, 정비담당자 △무안공항 관련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이다.

국토부 장관은 안전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항공기 운항, 비상상황 대응 등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

이들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

요해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마침내 형사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12·29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교육청, 5·18 앞두고 ‘학생 희생자’ 추모

광주시교육청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13일 본관 현관에서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추모행사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청소년 중 광주지역 학교에 학적용 둔 19명의 학생을 기억하고, 그날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희생자는 도청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최후의 항전 끝에 희생된 문재학·안종필(동성고)·박성용(조대부고) 학생, 시민군 버스를 타고 화순으로 관을 구하러 가던 중 주남마을에서 희생된 박현숙(송원여자상업고)·황호걸(광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 학생, 부상당한 시민들을 위해 헌혈하고 귀가하다 희생된 박금희(전남여자상업고) 학생 등 총 19명이다.

행사는 모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월 서가’ 전시 △5·18 역사 퀴즈 △5·18 조형물에 추모카드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행사장에 전시된 20여권의 5·18 관

련 도서를 읽은 후 ‘5·18 역사 퀴즈’에 참여하고, 학생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연을 담은 ‘추모카드’에 추모 문구를 작성하며 5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관 로비에 1980년 5월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밝히는 햇불이 됐다는 의미를 담은 5·18 조형물 ‘오월의 햇불’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손 글씨로 작성한 추모카드를 전시했다.

시교육청은 ‘오월의 햇불’ 조형물을 5·18 기념주간인 24일까지 설치해 많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14·23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으로 운영하고 1층 도란마루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1980년 5월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이다”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미래를 밝히는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산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 31명 위장전입 의혹...비대위, 경찰 고발

“시 산하 의료기관서 계획 정황”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원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된 과정에서 조직적인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도(삼거)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삼거동 실제 거주 세대주 88명 중 48명이 소각장 유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될 무렵 삼거동에 새롭게 전입한 세대

주가 무려 31명에 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자원회수시설은 관련 절차상 세대주 50%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새롭게 전입한 31명 중 5명 이상의 위장전입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소각장 부지 선정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전입자 중 상당수가 광주시 산하 의료기관 등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장전입 여부와 광주시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명백히 확인하고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직후 광주 광산경찰서에 위장전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고발조치 이후 조만간 자원회수센터 후보지 선정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져본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 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덀파)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	